

##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학(해설)

###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학 정답표】

문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㉔	㉔	㉕	㉑	㉑	㉕	㉑	㉓	㉑	㉒	㉓	㉓	㉕	㉓	㉕	㉓	㉑	㉕	㉒	㉕
문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㉓	㉕	㉕	㉒	㉑	㉒	㉕	㉒	㉒	㉕	㉒	㉑	㉑	㉑	㉓	㉕	㉓	㉒	㉓	㉕

#### ■ 분야별 출제 구분 ■

구분	문항 수	문항 번호
경찰학의 기초이론	9문	01, 02, 06, 08, 09, 10, 11, 12, 13,
한국·외국경찰사	3문	03, 04, 05
경찰행정법 (조직·공무원·작용·구제)	17문	07,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5
경찰행정학	6문	29, 30, 31, 32, 33, 34,
분야별 경찰활동	5문	36, 37, 38, 39, 40
구별기준	서진호 경찰학 기본서 편재에 따름(강사별 상이할 수 있음)	

#### ■ 전체 총평 ■

- ① 경찰학의 경우 80점 이상이면 충분히 합격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② 난이도를 구분하면 ㉑ “최상”은 3번, 7번, 39번 문제이다. ㉒ “상”은 4번, 17번, 22번, 25번, 27번이다. ㉓ 기타 문제는 대부분 “중” 또는 “하”로 구분된다.
- ③ 난이도 “중”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문이 제법 보였다. 많은 유추적용이 필요하다.

#### ■ 대표적인 특징 ■

- ① 순검직무세칙, 범죄즉결례, 루즈벨트 대통령, 총경의 재산등록 각 대상별 기준(역대급 난이도), 국가보안법의 처벌 규정, 정책결정모델(일부)은 너무 지엽적이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 문제가 대거 출제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판례도 적정선에서 충분히 유추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향후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대거 출제되는 방향성이 옳다.
- ③ 늘, 강조하였는바 경찰간부시험에서는 범죄이론 등의 출제빈도가 감소되는 점(범죄학 과목이 있으므로), 경찰학은 일반행정법을 지나칠 정도로 공부해서는 안되는 점 등이 이번 시험에서 증명되었다.

#### ■ 향후 공부방법론 ■

- ① 경찰학의 널뛰기성 출제경향에 두려워 말고, 공부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 지엽적인 것에 투자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 ② 기본과 기출에 충실하되, 많은 모의고사를 통하여 함정에 항상 유의하도록 하자.

**【문제 01】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다”, “라”는 옳은 설명이며, “가”, “나”, “마”는 틀린 설명이다.

가. (×)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직접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조직이 아닌 성질·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며, 이론적·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특히,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일반조항의 존재를 전제로, 경찰행정관청에 대한 권한의 포괄적 수권과 법치국가적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도구개념이다.

나.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즉,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며 서로 포함관계는 아니다.

마. (×) 현대의 법 규정에 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내용 및 성질을 불문하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업무에 속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무상 확립된 개념으로서 생활안전, 수사(사법경찰활동), 경비, 교통, 공공안녕정보, 안보수사(보안), 외사 등이 해당한다.

**【참고】 공물경찰**

- ① 공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경찰권의 작용을 말한다.
- ② 공물의 사용은 그 방법의 여하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를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로통행의 금지·제한 등의 경찰작용이 공물에 대하여 행하여지게 된다.
- ③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명령·강제·권력적 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된다.

**【문제 02】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가”, “나”, “다”는 옳은 설명이며, “라”, “마”는 틀린 설명이다.

라.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것은 1795년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이다.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은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라고 규정하였다.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및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

마. (×) 1931년 독일의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경찰의 직무범위를 소극적 목적에 한정하는 경찰개념을 확립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

**【문제 03】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最上

**【해설】** “가”, “라”는 옳은 설명이며, “나”, “다”는 틀린 설명이다.

나. (×) 「순검직무제척」은 1896년 제정되었다. 내용의 핵심은 순검의 임용과 직무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 민(民)의 피해예방, ㉡ 건강보호, ㉢ 방탕음일 제지, ㉣ 국법 위반자에 대한 탐포(탐지 및 포착) 등이다. 이 밖에도 감옥사무(간수 등), 죄인호송, 고위관리 경호를 맡았다. 순검의 근무 중 다치거나 순직했을 때의 치료비와 장례비 지급규정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 (×) 「범죄즉결례」는 1910년 일본이 조선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죄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처벌하도록 제정한 법령이다.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행정 법규 위반 따위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관련 처벌행위는 87개의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라”지문의 이의제기 가능성(개인적 의견) - 서진호 강사 향후 이의제기 예정

「치안유지법」 관련하여 1925년 제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제정된 국가가 일본이다. 즉,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는 등 오히려 탄압체제가 강화되었다. 해당 지문은 제정이 일본에서 된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문제 04】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上

**【해설】** “가”, “나”, “다”는 옳은 설명이며, “라”는 틀린 설명이다.

라. (×)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 수사국”으로 설립되었다. 수사국이 향후 연방수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문제 05】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下

**【해설】** “가”, “나”, “다”, “라” 모두 옳은 설명이다.

**【참고】** 박재표 경위

- ① 1956년 8·13지방선거 당시 자유당이 저지른 ‘환표(換票)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인물이다.
- ② 1956년 당시 전북 정읍군 소성(所聲)지에서 순경으로 근무했다.
- ③ 선거 직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던 중 ‘표 바꿔치기’, 즉 환표를 목격했다. 투표함을 호송하던 경찰관들이 당시 여당인 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야당 후보에게 투표한 표를 여당 후보 표로 바꾸는 것이었다.

**【문제 06】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上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보기의 설명은 로크(John Locke, 1632~1679)가 주장한 사회계약론의 내용이다. 로크는 입법과 행정의 2권분립(입법권 우위)으로 제한군주정치가 나타나며, 따라서 시민권의 확보로 혁명이 가능하고, 저항권은 유보된다고 보았다.

**【문제 07】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最上

**【해설】** “가”와 “다”의 경우에는 甲총경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의 총액이며, “나”, “라”, “마”, “바”는 등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등록대산재상(「공직자윤리법」 제4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 본인
-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 주식매수선택권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문제 08】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② (×)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제1항).

④ (×)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 강령 제15조 제2항).

**【문제 09】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①은 옳은 설명이며, ②,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다음 날부터 ×)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제1항).

③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한 공직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 제2항).

④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

**【문제 10】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지만,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가능하다. 법익의 위험이 인간의 행동에 의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연력의 결과에 의한 것인지는 불문한다.

**【문제 11】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제1항).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제2항).

**【참고】** ②번 지문의 복수정답 처리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문제 12】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클라이니히가 주장한 경찰윤리교육의 목적에는 “도덕적 연대책임 향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구 분	내 용
도덕적 결의의 강화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외부로부터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경찰관이 실무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이타적으로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이다.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 (가장 중요한 목적)	경찰이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문제 13】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보기의 설명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때로는 구역 클럽(소규모 단체)을 만들어 지역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과 협동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 14】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참고】 사전컨설팅 감사의 대상**(「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인가·허가·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
- ② 법령·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 ③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제 15】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부정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 모두 취소하도록 한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판례).

**【참고】 ③번 지문 복수정답 처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직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익에만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해당 권한 내에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 또한 공무집행의 요건과 방법을 갖추어야 하며 공직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16】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평등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9조,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0조,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1조 제2항,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17】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上

**【해설】** “가”, “나”, “다”, “라” 모두 틀린 설명이다.

가. (×) 강제보호조치 대상자는 반드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자가 거절해도 강제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실행행사를 감수하고 이에 저항하지 아니할 공법상 의무가 발생한다.

나.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이나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상대방은 실행행사를 감수하고 이에 저항하지 아니할 공법상 의무가 발생한다.

다. (×) 경찰관은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명하는 경찰하명이다.

라.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납부의무는 금전 또는 물품의 급부의무를 과하는 경찰하명이다.

**【문제 18】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 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통상의 사회평균인이 보더라도 의심을 긍정할 정도의 판단을 요한다.



**【문제 19】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0】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가”, “나”, “다”, “라” 모두 옳은 설명이다.

**【참고】 무기사용의 한계(판례)**

- ①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다.
- ②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 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이다.
- ③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는 총기사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④ 50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 목적으로 오토바이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문제 21】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항).

**【문제 22】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上

**【해설】** (가)는 구체적, (나)는 구체적, (다)는 통상적, (라)는 직접적이다.

(가), (나) 경찰장비 사용의 유무는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의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다)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해당 직무수행은 위법하다.

(라) 정당방위는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이다.

**【참고】 쌍용자동차 사건(판례)**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를 고려해 보면,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방법 및 그 과정에서 어떤 경찰장비를 사용할 것인지는 구체적 상황과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경찰관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면, 불법적인 농성의 진압을 위하여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해당 경찰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경찰관이 농성 진압의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문제 23】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국가의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작용이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법적 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또는 작위·부작위이든 모두 포함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도 직무행위에 포함되고,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도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 아닌 한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많은 주민이 들어서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반이 조직되고 주민세를 부과하는 등의 관리행정까지 실시해 왔다면 그 자치단체로서는 의당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주택가 내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인데, 그 의무를 해태(懈怠)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자치단체로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문제 24】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上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다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우리나라와 영미법계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문제 25】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上

**【해설】** “라”는 옳은 설명이며, “가”, “나”, “다”는 틀린 설명이다.

가.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처분권한을 갖고, 수임 또는 수탁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게 되므로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처분청이 된다. 따라서 피고적격자는 A경찰서장이다.

나. (×) 운전면허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42조).

다.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불가하다.

**【문제 26】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上

**【해설】** “가”, “나”, “다”, “바”는 옳은 설명이며, “라”, “마”는 틀린 설명이다.

라.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마.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 ㉡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 ㉢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 ㉤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문제 27】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만료된 날 ×)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1항).

② (×)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3항).

③ (×) 임용권자는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다.

**【문제 28】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징계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2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문제 29】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上

**【해설】** ②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정책결정자가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최선을 대안을 결정하는 모델은 합리모델이다. 『합리 모델』(rational model)은 관련된 모든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객관적 합리성과, 주어진 목적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주관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한 이론모델이다.

③ 보기의 내용은 최적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최적모델은 합리모델의 비현실성과 점증모델의 보수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통합을 시도한 것으로서,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증주의 성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정책방향도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④ (×) 보기의 내용은 점진모델(= 점증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점진모델』(incremental model)은 정책결정은 경제적 합리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이 크게 작용한다는 이론모델이다(예 : 예산의 전년도 위주의 편성 등).

**【문제 30】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 전문적·창의적·복잡한 업무보다는 동질적·단순한 업무일수록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 통솔범위는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좁아지고, 계층의 수가 적어질수록 넓어진다. 즉, 통솔범위와 계층의 수는 반비례관계이다.

**【문제 31】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나”는 옳은 설명이며, “가”, “다”, “라”는 틀린 설명이다.

가. (×)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전되어 가는 기반이 되지만, “실적주의 자체가 바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도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채용연령의 제한으로 공직에의 기회균등을 저해할 수 있다.

다. (×)계급제가 직위분류제에 비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더 유리하다.

라. (×)직업공무원제도는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문제 32】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上

**【해설】** “다”는 옳은 설명이며, “가”, “나”, “라”는 틀린 설명이다.

가.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9조 제1항).

나.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6조 제1항).

라. (×)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59조).

**【문제 33】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下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는 절대적 회수대상이 아니라 임의적 회수·보관대상이다.

- ㉠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 ㉡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 ㉢ 사의를 표명한 자

**【문제 34】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나”는 옳은 설명이며, “가”, “다”, “라”는 틀린 설명이다.

가. (×) 맥클리랜드는 인간의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구분하였다.

다. (×) 맥그리거(McGregor)의 『X·Y이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을 X와 Y 두 가지로 대별해 각각의 특성에 따른 관리전략을 처방한 이론을 말한다. 2가지의 인간본성을 제시하면서 “Y이론에 입각한 관리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기의 설명은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에 대한 내용이다.

라. (×) 엘더퍼는 성장욕구, 관계(Relatedness)욕구, 존재욕구(= 생존욕구)로 구분하였다. 매슬로우는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순차적으로 상위에 것을 추구한 다고 주장했고, 하위의 것이 만족되면 반드시 상위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말했지만 엘더퍼는 하위 것을 만족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다가 막히면 계속 그것을 추구하기 보다 나머지 두 가지에 더 집중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위 단계를 추구하다 잘 안되면 하위단계에 더 집착한다고 한다. 또한 반드시 하위의 것을 충족해야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의 것이 만족 되지 않더라도 상위의 것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 35】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中

**【해설】** “나”는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하며, “가”, “다”, “라”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가) 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크기는 설치목적, 배치 인원 및 장비,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정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나)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다) 치안센터 전담근무자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치안센터의 종류 및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정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라)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문제 36】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① (×)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3항).

②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 피해아동의 보호, ㉡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 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

③ (×)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문제 37】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가”, “다”, “마”는 잠정조치의 유형에 해당하며, “나”, “라”는 응급조치의 유형에 해당한다.

**【참고】**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내용(「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①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 ②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③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④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

**【참고】** 잠정조치의 내용(「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②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2024. 1. 12. 시행】**
-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문제 38】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②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 보기의 설명은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③ (×) 재난발생시 소방관련기관은 『긴급구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찰관련기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

**【문제 39】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上  
**【해설】** “가”는 옳은 설명이며, “나”, “다”, “라”는 틀린 설명이다.

나.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는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음모도 처벌한다. 반국가단체 가입권유죄는 미수는 처벌하지만,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 (×) 특수직무유기죄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죄의 범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 (×) 『특수 잠입·탈출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함으로써 성립한다(「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특수 잠입·탈출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국가보안법」상 형의 감면 규정**

형의 필요적 감면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① 불고지(제10조) : 본범과 친족관계인 경우 ② 자수한 때 ③ 타인의 범죄를 고발하거나 방해한 때
형의 임의적 감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단순편의제공(제9조 제2항) : 본범과 친족관계인 경우 ② 특수직무유기(제11조) : 본범과 친족관계인 경우

**【문제 40】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① (×) 『필수요원』이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에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의미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5호).

② (×) 교통비상은 교통소관이다. 비상근무는 그 비상상황의 유형에 따라 경비비상(경비 소관), 작전비상(경비 소관), 안보비상(안보 소관), 수사비상(수사 소관), 교통비상(교통 소관), 재난비상(치안상황 소관)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 제1항). 중요한 것은 생활안전비상은 비상근무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 경계강화 발령시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한다.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 제1항)

